

중국팀

중국, 신규 관세법에 대중국 관세 부과 행위 맞대응 명시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4월 26일 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중국이 맞대응하겠다는 내용(제17조)을 포함하는 ‘관세법(關稅法)’을 통과시킴.
- 관세법은 2003년 제정된 ‘수출입관리조례(進出口關稅條例)’를 대체하는 법으로,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조례보다 상위법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관세법 제17조에는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 혹은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對等原則)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됨.
 - 이는 기존 수출입관리조례에는 없던 내용이며,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되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끄.
 -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인상을 지시함.
 - 4월 24일 방중한 미국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블링컨 방중기간에 관세법 통과·공표

표 1. 중국의 관세법·기존 법규의 관련 내용

수출입관리조례(2003)	관세법(2024.12.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중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역협정·관련 협정을 위반하여 중국의 무역을 금지·제한하거나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중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협정의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18조: 중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협정을 위반하여 중국의 무역을 금지·제한하거나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외무역법(2004)

- 제47조: 중국과 경제무역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중국이 조약·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조약·협정의 목표실현을 저해할 경우, 중국정부는 해당 국가가 적당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약·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중지할 수 있음.

자료: 「中华人民共和国關稅法」, 「中华人民共和国進出口關稅條例」, 「中华人民共和国對外貿易法」.

표 2. 최근 주요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움직임

국가	일시	주요 조치
미국	2024.4.17	바이든 대통령이 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지시
칠레	2024.4.22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2024.5.14	바이든 대통령이 USTR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 인상 지시
EU	-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중, 관세 인상 검토

자료: 동아일보(2024.5.14), 「美 “싸도 너무 싸” 中전기차 관세 25%→100%로… 中, 보복 시사」 등 언론보도 종합.

□ 기존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에 유사한 내용이 있기에 관세법 제17조가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나, 중국이 대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맞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¹⁾

-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 중국정부는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맞대응함.

○ △미국이 중국산 철·전기기계 등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함.²⁾

- 관세법 17조는 상호주의 원칙(對等原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³⁾

○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중국법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중 무역분쟁 시 중국은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호혜(互惠)’가 아닌 자국 무역 보호를 위한 ‘대등(對等)’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나, 미국의 용어(對等)를 자국법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⁴⁾

○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계자는 관세법 제정 배경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에 적극적·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세의 역할 및 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꼽았으며, 특히 제17조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고 관세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 설명⁵⁾

□ 향후 중국의 관세법을 활용한 대응 강도 변화 및 이에 따른 교역 변화에 주의해야 함.

- 중국의 맞대응이 강화되어 미중 교역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대비 필요

박진희

1) China Briefing(2024.5.13), 「China’s New Tariff Law: Consolidating and Codifying Existing Tariff Regulations」; Reuters(2024.4.26), 「China passes tariff law amid tensions with trading partners」.

2) 中国政府网(2028.8.16),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3) China Briefing(2024.5.13), 「China’s New Tariff Law: Consolidating and Codifying Existing Tariff Regulations」.

4) 트럼프는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재선 시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함. Reuters(2024.4.26), 「China passes tariff law amid tensions with trading partners」; 孙杰(2018.4.1.), 「对等贸易: 特朗普挑战世界贸易规则体系」; 「中美贸易之争, 双方一向各执一词怎么回事?」.

5) 新华社(2024.4.27), 「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有关负责人就关税法答记者问」.